예결위, 노영민 · 강기정 출석 '기싸움'

"대통령 순방 중 비서실장 불출석은 관례" vs "강기정 나와야"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재개 절실" vs "평화경제 인식 잘못"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5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심사를 진행했는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의 여진이 예결위를 덮쳤다. 야권은 국감 파행 사태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출석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비서실장 대신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국민을 보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은 "국회와 정치, 헌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행위를 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운영위 국감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결위에선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면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라고도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수석의) 발언 이후 유감표명이 끝나고 운영위가 산회한 것인데 다 해결된 것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회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여야는 노 실장과 강 수석의 출석을 놓고 한동안 옥신각신했고 고성도 오갔다. 결국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촉구하면서 신경전은 다소 일단락됐다. 다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 까닭에 향후 재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예산 관련 질의에 들어가자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절실하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다"며 "하루건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경제에 돈을 쓴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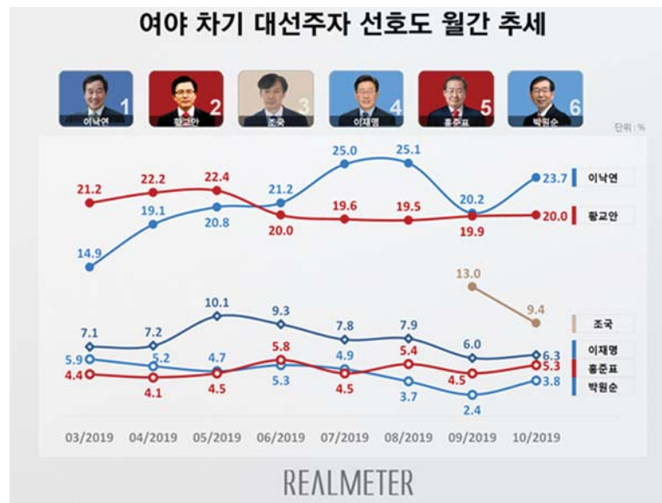
정 의원은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전혀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돈을 퍼붓겠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면서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통일부가 지뢰제거 사업, 하계 올림픽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데 대해 "오지랖 넓게 통일부에서 이것을 왜 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현재와 같이 긴장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의 필요성은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무단으로 이 · 전용 된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용기 의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차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캐물은 후 "해명이 안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조국 지지율'이 이낙연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 23.7% · 황교안 20.0% · 조국 9.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7%p 격차로 각각 1 · 2위를 기록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3.7%로 조사 대상 14명 중 가장 높았다.

5달 연속 1위를 기록한 이 총리 선호도는 직전 조사인 10월보다 3.5%p 올라 반등세를 보였다.

이 총리 선호도는 호남과 서울, 부산 · 울산 · 경남(PK), 경기 · 인천, 50대와 20대, 60대 이상,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 · 민주당 ·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지만, 30대와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2위인 황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1%p 오른 20.0%를 기록하며 5개월째 20% 선을 횡보했다.

황 대표는 대구 · 경북(TK)과 충청, 서울, 20대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PK와 호남, 5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 · 바른미래당 · 민주당 ·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

황 대표가 1위를 기록한 지역 · 계층은 대구 · 경북(30.4%)과 대전 · 세종 · 충청(26.1%), 부산 · 울산 · 경남(23.2%), 60대 이상(30.4%), 보수층(40.8%), 문재인 대통령 반대층(39.4%), 한국당 지지층(52.9%)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된 조 전 장관은 3위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14일 사퇴의 영향으로 3.6%p 떨어진 9.4%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은 TK와 경기 · 인천, 서울, 호남, PK, 50대와 30대, 40대, 2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0.3%p 오른 6.3%로 4위를 유지했다. 이 지사는 호남과 서울, 40대, 중도층,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한 반면, TK와 20대,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

이어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5.3%), 박원순 서울시장(3.8%),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3.5%),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3.3%), 심상정 정의당 대표(3.2%), 오세훈 전 서울시장(2.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2.5%), 김경수 경남지사(2.3%), 김부겸 민주당 의원(1.5%), 원희룡 제주지사(1.0%) 순으로 조사됐다. '없음'은 8.7%, '모름/무응답'은 2.9%로 집계됐다.

범진보 · 여권 주자군(이낙연 · 조국 · 이재명 · 박원순 · 심상정 · 김경수 · 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0.4%p 오른 50.2%로 조사됐다.

범보수 · 야권 주자군(황교안 · 홍준표 · 유승민 · 안철수 · 오세훈 · 나경원 · 원희룡)은 0.3%p 오른 38.2%였다.

文대통령, 8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윤석열 참석 전망

'공정 행보'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하루 앞둔 8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처음으로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모친상을 당하면서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모양새다. 특히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대입 정시 확대 · 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본래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회의 개최 주기는 절반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검찰개혁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다짐했다.

대안신당 "5 · 18 진상규명 특별법 발효…여야협력 과제"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5일 5 · 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 발효와 관련해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여야의 협력이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5 · 18 정사(正史)를 기록하자'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5 · 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효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5 · 18 40주기를 앞두고 5 · 18의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